

일반 논문

## 북관대첩비반환과 남북관계\* \*\*

오은경 (서강대학교)

## 국문요약

북관대첩비는 2005년 한국을 통해 원소재지인 북한으로 반환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반출된 북관대첩비가 2005년에 고국에 반환될 때까지 4차례의 반환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앞선 3차례 반환 논의는 반환이라는 결과값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그중에서도 남북관계의 갈등국면은 해당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 또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서 민간단체 및 종교 단체 등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북관대첩비 반환을 이끌어내었지만 그것만으로 왜 2005년에 최종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엔 다소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된 2005년,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재 반환에 있어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제어: 북관대첩비, 남북관계, 문화재 반환, 국가 간 관계, 협력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5.1.202306.251>

\* 본 논문은 2019년 8월에 일본 리츠메이칸대학에서 개최된 '제12회 일한차세대 연구자포럼'과 2019년 10월에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15회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공동학술제에서 '북관대첩비 반환과 남북일관계'란 이름으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하였음.

\*\* 본 주제를 하나의 논문으로 완성하는 과정에서 근 4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 주제에 관심 가져주시고 관련 자료들과 학술회의 등을 추천해주셨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故류석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I. 들어가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한일관계는 여전히 역사이슈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에 다소 어렵다.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 특히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비단 특정 시기에 한정되어 제기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의 진일보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동시에 동북아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는 데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특정 이슈나 사건들이 특정 시기에 각광을 받거나 재조명되곤 했을 뿐, 역사이슈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점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국가 간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역사문제는 앞으로도 한반도와 일본 간 관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은 역사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문화재 반환 협상은 남북한이 협력하여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일본으로부터 긍정적인 결과값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상호 협력하여 문화재 반환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낸 과정과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은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 남북한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를 상호 협력하여 다시 되찾아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일본 역시 남북한의 반환 요구에 화답함으로써 상호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가? 북관대첩비 반환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민간교류의 중요성이나 시민단체의 영향력 등에 중심축을 두고 있다.<sup>1)</sup> 이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나

국제정세 등과 같은 요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 반환은 해당 문화재가 반출되었던 시기와 시·공간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가 반환되는 시점에서의 관련 국가 간 관계나 조율을 배제하기 어렵다.<sup>2)</sup> 또한, 남한과 북한과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문화재 반환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간 관계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북관대첩비의 경우,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는 북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청한 주체는 남한이었다. 즉, 북한과 남한이 모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어디로 반환 할 것인가’에 대한 남과 북의 조율과 합의였다. 북관대첩비의 경우, 반출되었을 당시에는 조선의 문화재였다. 그러나 초기 반환 논의에서는 남과 북이 모두 북관대첩비 반환국으로서 정당성과 명분을 주장하였다. 즉, 북관대첩비 반환은 반출될 때와는 달리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반환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이 반환의 주체에 관하여 남과 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음을 의미한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민

1)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1호 (2016 봄); 구진봉·최은봉,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 속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의 역할: 문화재 소유권의 쟁점화와 협상의 국면전환」 『문화와 정치』 제9권 2호 (2022).

2) 여기서 시공간적인 거리감은 해당문화재가 반출된 시기와 반환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거리감을 의미한다. 특히, 북관대첩비 반환의 경우, 북관대첩비가 반출된 당시에는 조선이 단일국가였지만, 반환이 논의되는 시기에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문화재가 분단된 국가 중 어느 국가로 반환되는가를 조율해야만 했다. 이는 반출된 문화재가 반환될 때에는 원소유지로부터의 공간적인 거리감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화재 반환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은 이러한 거리감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조율과 합의가 필수적이다.

간교류와 더불어 남북관계 등과 같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다.

북관대첩비 반환과정을 보면, 남북관계가 상호 우호적일 때, 반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의 최종 반환 결정 역시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적대적 남북관계는 일본으로 하여금 반환을 결정함에 있어 정치적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 간 합의도 어렵게 만들었다. 이는 1970년대와 1990년 반환 논의를 통해 파악해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논의는 남북이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되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문화재반환 역시도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관대첩비가 반환된 2005년에는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반환 요청과 반환을 위한 실무적 차원의 준비가 진행되었다. 2005년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 60주년 추진기획단, 문화재청이 1-2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주무부처의 국장급 회의 등을 포함해 정부 중심의 적극적인 실무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이 공고화는 남과 북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이 이벤트적인 단발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에 대한 논의를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3개국 관계변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 문화재 반환과 국가 간 관계

문화재 반환은 해당 국가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모색케 한다. 문화재는 단순히 과거에 제작된 물건이기보다 특정 국가의 정신적·문화적 상징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국가 또는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포함하기도 한다. 전쟁 또는 식민지시기에 문화재 반출을 경험한 국가는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빼앗겼다는 의미와 정치적인 사안을 넘어 정신적·민족사적 가치의 훼손으로 인식하게 된다. 문화재 약탈은 식민 지배 또는 전쟁에 대한 충격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하게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도 여전히 그 때의 암울했던 기억과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적 약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다소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 후손들은 해당 시기를 직접 경험하지 않지만, 문화재 반출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나 역사문제를 접하면서 해당 문화재의 부재 또는 박탈감을 경험할 수는 있다. 이는 해당 문화재를 반출해 간 국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진다. 문화재 반출은 이렇듯 그 자체로 부정적인 여론을 강하게 자극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간 관계도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재 반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정신적·문화적인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문화의 부활이자, 불법과 부정함에 대한 정의의 회복을 의미한다.<sup>3)</sup> 또한, 문화재 약탈, 도난 또는 반출로 인해 생긴 과거의 고통에 대한 치유를 가능케 한다.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제는 관련 국가들의 진일보한 관계 개선을 위해 극복해야

3) Boa Rhee,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집 1호 (2008), 248~250쪽.

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반출과 반환은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의 반출은 침탈국과 피탈국이라는 상황에서 발생되지만 반환은 국가 간 상호 관계와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반출 당시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진행된다.<sup>4)</sup> 따라서 문화재의 반환은 문화재가 지니는 정신적·문화적 가치와 더불어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문화재 반환은 피탈국과 침탈국의 국가 간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결과의 성패가 달려있다.

또한, 문화재 반환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본국귀환(repatriation)’을 중심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해당 논의를 다룬 연구의 경우, 외규장각 반환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을 문화민족주의(cultural nationalism)와 문화국제주의(cultural internationalism), 2가지 대립되는 입장으로 나누어 프랑스 측의 입장을 분석하였다.<sup>5)</sup> 이를 통해 본다면 문화재 반환 논의는 크게 위의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문화민족주의는 ‘본국귀환(repatriation)’의 입장을 대변하며 민족동질성의 측면에서 유형의 대상물을 통해 무형의 정신적 유산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해당 문화재가 원소재지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국제주의는 해당 문화재를 국가 중심적이 아니라 작품 중심으로 간주하여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해당 문화재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측 주장을 옹호하는 양상을 보인다.<sup>6)</sup> 이에 따라 약탈된 문화재의 본국 귀환을 주장하는 국가들은 문화재를 약탈당한 국가로 문화민족주의에 강조점을 두

4)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06쪽.

5) 박선희, 「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51집 4호 (2011), 219쪽.

6) 위의 글, 219쪽.

고 있으며, 문화재를 약탈한 국가는 국제주의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분석하고자 함이 아니라 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들 역시 중국엔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또한 반출된 문화재의 본국귀환 여부는 원소재지 국가와의 협의나 조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국가 간 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문화재 반환은 어떠한가? 남북한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정전회담이 결렬된 1597년의 이듬해인 1598년에 발발한 정유재란 등을 겪었으며,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도 경험했다. 즉,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쟁과 식민지를 모두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문화재를 반출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며,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들 중 70%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sup>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반출은 일본이 자신의 식민지로부터 문화재를 반출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반출 과정을 통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며, 당시 해당 문화재 소유국인 조선의 동의를 얻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문화재가 반출된 이후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남북한의 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반출된 문화재 반환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2004-5년을 중심으로 국가 간 관계를 보면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었고 이를 위한 실무진 협의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남

7) Boa Rhee,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245쪽.

북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sup>8)</sup> 고이즈미 수상이 2002년, 2004년 방북하였고 평양 선언을 발표하며 북일관계는 정상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양국 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2003년 6월 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을 가졌고, 10월 8일 아세안+3와 10월 20일 APEC에서도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004년 7월 21일과 12월 17일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현, 2005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sup>9)</sup> 2002년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도 한일 양국은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간의 마찰로 인해 이러한 관계는 지속되지 못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던 시기의 국가 간 관계를 본다면 비록 관계 정상화와 역사문제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각 국가들은 서로 간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남북 간 협력관계가 급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남북경협은 일본으로 하여금 이러한 협력관계를 함께 모색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가 간 관계는 서로 간 협력을 중심으로 문화재 반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8)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2005), 172쪽.

9)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노무현-고이즈미 한일정상회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tid=003095&pageFlag=&sitePage=1-2-1>).



### Ⅲ.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에서의 남북 관계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함경도 길주, 단천, 백담 등지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군대를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4년(1708년) 북평사 최창대(崔昌大)가 비문을 쓰고 마을 주민의 뜻을 모아 건립되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유출된 때는 러일전쟁이었다. 러일전쟁 당시 함경북도에 진주한 일본군 제2사단 제17여단장 이끼다마사스끼 소장이 비를 발견하고 자국의 패전 기록을 수치스럽게 여겨 주민을 협박하여 강탈하였다. 북관대첩비는 1905년 10월 미요시 사단장 귀국 시 선적되어 10월 28일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하였고, 1906년 5월 27일 동경만에 하역되어 그 후 일본 황실에서 보관되다 야스쿠니 신사 유취관 등으로 옮겨졌다.<sup>10)</sup> 북관대첩비는 반출된 지 100년만인 2005년 10월 20일 남한으로 돌아와 2006년 3월 1일 개성에서 북측에 인도되었다.

#### 1. 1909년~1936년: 첫 번째 북관대첩비 반환요구

1909년,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조소양(趙素昂)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북관대첩비를 발견하고는 『대한홍학보』에 비를 가져온 일본을 꾸짖는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1909년)이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북관대첩비의 소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조소양은 이 글을 통해 "누가 이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것이며 (북관대첩비를 빼앗긴) 큰 죄를 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하였다.<sup>11)</sup> 조소양의 글을 통해, 당시 일본이 북관대첩비를 일본

10) 문화재청, 『북관대첩비환수추진 자료집』(대전: 문화재청, 2005), 9쪽.

으로 반출한 상황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고, 조선의 동의를 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한, 조소앙이 사용한 “분개”, “큰 죄” 등의 단어는 일본의 문화재 반출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발과 박탈감을 나타낸다. 1909년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국권을 거의 빼앗겼다. 조선인들은 일본의 문화재 반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북관대첩비 반출에 대응하여 국가적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려웠다.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에 대한 소식은 1926년, 한 투고자에 의해 알려졌다. 이생(李生)이라고만 알려진 무명의 투고자가 북관대첩비의 소식을 간략하게 전하면서, 비석 옆에 "대첩이라 하였지마는 그 때의 사실과는 전연 서로 다르니 세인은 이 비문을 믿지 말라"고 쓴 나무패가 서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sup>12)</sup> 1910년에 조선은 일본에 강제 병합되었고, 국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1920년대 조선의 상황은 1909년보다 암울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반출되었을 당시, 반환요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기 되었거나 일본에 머무는 투고자를 통해 북관대첩비 소식을 업데이트 하는 수준에서 논의되었다. 북관대첩비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던 당시, 조선과 일본 간 관계를 통해 본다면, 조선이 일본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하기엔 정치적 제약이 존재했고, 조선이 일본에 반환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1) 嘯海生騰,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대한홍학보 제5호』(온라인), 1909년 07월 20일, <[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 문화재청, 「관(官)과 민(民), 남북 협력으로 환수 북관대첩비」(온라인), 2016년 7월 29일, <[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232&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http://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232&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귀환」 『한겨레』(온라인), 2005년 10월 10일, <<https://www.hani.co.kr/kisa/section-001006000/2005/10/001006000200510102257059.html>>.

12) 「北關大捷碑」 『동아일보』(온라인), 1926년 6월 19일,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pda\\_1926\\_06\\_19\\_v0003\\_0540](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pda_1926_06_19_v0003_0540)>.

## 2. 1970년대: 북관대첩비 반환요구, 최초로 대중에게 알려지다

일본으로 반출된 북관대첩비는 1978년에 재일사학자 최서면에 의해 야스쿠니 신사에서 존재가 확인되었다. 최서면은 1978년 당시 동경한국문화 연구원에서 발간하는『韓』의 기고문에서 북관대첩비 발견에 대해 논하였다. 같은 해, 정문부 문중인 해주정씨문중이 한일친선협회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요청했다. 다음 해인 1979년에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반환요청에 조총련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반환 협상이 결렬되었다.<sup>13)</sup> 1978년에 일본으로 반출된 이후 처음으로 북관대첩비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는 최초로 대중에게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요청은 정문부 문중과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합의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총련의 반발은 한국의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파악 가능케 한다. 남한과 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남한에서는 해주정씨문중이 정문부의 후손임을 강조하며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청했고, 북한은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를 강조하며 북관대첩비의 반환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는 한국이 처음으로 북관대첩비 존재를 확인하고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였던 만큼, 남한과 북한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하나 된 입장이나 의견을 표하기엔 어려웠다. 또한, 이 당시 남북관계 역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합의나 조율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제약조건으로 작용했다.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도발이 급증하였고, 남북 간 군사적

13)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29쪽.

긴장상태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둘러싼 남과 북의 갈등적 입장이 대치되면서 북관대첩비를 반환하는 문제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외무부의 공식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하였다.<sup>14)</sup> 한일친선협회는 반환요청과 관련해서 문화재반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회신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한과 북한의 입장차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협회가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게 되는 경우, 어떠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반환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또한 반환의 주체가 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역사적 연고를 가지는 원래의 장소로 북관대첩비가 재건 및 복원된다는 보증이 있는 것인지, 만일 역사적 연고지에 재건 복원되지 않는다면 역사적 연고지의 관계자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지 또는 그럴 경우 어떠한 입장인지 등을<sup>15)</sup> 해주정씨문중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반환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음을 파악해볼 수 있다.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초기 논의를 남북일 3개국 관계를 통해 본다면, 이 당시 남북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사적 긴장상태와 더불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 간 협의나 조율도 어려웠다는 점에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합치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남과 북의 이러한 적대적 관계는 일본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었다.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남과 북, 양쪽이 자국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관대첩비를 남과 북 중에 어느 한 국가에 반환한다는 선택은 일본에게 있어서 정치적 선택을 고려하게 하였다. 남

14)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2쪽.

1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86쪽.

과 북이 적대적인 긴장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일본에게 있어 남한과 북한 중에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해야 난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일본은 해주정씨문중의 남한과 북관대첩비 원소재지의 북한 모두를 반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 합의와 조율이 부재했다는 점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성사시키지 못했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3. 1990년대: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다시 시작되었다. 1994년 3-5월, 남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공식요청 하였고, 1994년 11월, 일본 참의원 이다가끼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 북관대첩비의 반환에 대한 신사 측 입장을 확인하여 외무부를 거쳐 문화재관리국에 통보하였다. 이 당시 신사측은 북관대첩비의 반환은 당초 비가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이 적절하다고 보나, 국교가 없는 북한과 문제가 되므로 한국과 북한이 조정이 된 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의뢰하면 조속히 반환할 방침을 밝혔다.<sup>16)</sup> 1990년대에 들어서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가 시작되었지만, 1970년대 때와 동일하게 반환 주체와 반환 장소에 대한 남북한 조정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1990년대 남북관계를 보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 간 합의 또는 조율이 이루어지기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특히,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은 남북 간 관계를 군사안보적, 정치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역사 문제나 문화재 반환의 논의들은 남한과 북한, 양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sup>16)</sup> 위의 글, 29쪽.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는 1997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한일문화재교류 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다시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한일문화재교류 위원회는 황실 간 만남과 협의를 추진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추진위원회(위원장 이승호(李承虎)한일문화재교류위원회 집행위원장)’는 1999년 1월 8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손 이구(李玖)가 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으로부터 북관대첩비 반환 동의를 얻어냈고 1월 24일, 이를 문건으로 약정했다고 밝혔다.<sup>17)</sup> 이 시기, 반환 논의 때 일본 측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당시 세계무역센터협회(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WTCA) 가이 토졸리(Guy F. Tozzoli) 총재였다. 가이 토졸리 총재의 적극적인 협조로 1999년 4월 15일에는 가이 토졸리 총재와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일에 활용하기로 하고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4월 27일에는 제30차 세계무역협회 총회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운동을 세계무역센터협회가 공식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고,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장으로 가이토졸리 총재가 선임되었다.<sup>18)</sup>

또한, 위원회는 1999년 6월 27일, “2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초 일본 황실로부터 북관대첩비의 반환 동의를 얻어냈다. 7월 20일 부산항에 도착 시킬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북관대첩비를 8월 20일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 측에 인도한다는 계획 아래 이를 정부 측과 협의 중이며, 북측 인도를 위해 가이 토졸리 세계무역센터협회총재의 중개로 북한의 이형철(李亨哲) 유엔전권대사로부터 북한이 인수하겠다는 서한을 6월 초 받기도 했다.<sup>19)</sup> 이와 더불어 당시 위원장은, “토졸리 총재는 올해

17) 「북관대첩비 반환」 『동아일보』 (온라인), 1999년 6월 28일,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90628>>).

18)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7쪽.

19) 「북관대첩비 반환」 『동아일보』, 1999년 6월 28일.

초 북한을 방문해 북관대첩비를 받아들이겠다는 북한 측의 동의를 받았으며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도 북관대첩비가 판문점을 통과할 때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 병사들이 호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sup>20)</sup>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그 당시 통일부 관계자를 통해 파악해 볼 수 있다. 당시 통일부 관계자는 북관대첩비의 국내반환을 확인하였다. 그러면서 “이형철 북한대사의 문건에 북한 반입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7월말 경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언급했다.<sup>21)</sup>

북관대첩비가 조선시기의 문화재라는 점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인 이구와 당시 일본 천황인 아키히토의 만남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올랐다. 이구로 대표되는 대한제국은 한반도의 대표성을 상징적으로 지니기 때문에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과 북의 입장 차이를 조율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왕실 간 협이나 만남이 북관대첩비 반환의 직접적인 변수라고 보기엔 다소 어렵다. 특히, 일본의 정치를 고려한다면, 천황이 야스쿠니 신사 소유의 문화재 반환에 관여하는 것은 일본 국내정치적으로 다소 납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세손이 일본 황실과 반환에 대한 합의와 조율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문화재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은 남한과 북한의 공식적인 합의와 논의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이 시기, 황실 간 만남과 협의는 문화재가 반출될 당시 조선황실의 후손과 일본 황실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 정도를 내포했다.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남북한의 조율

20) 위의 자료.

21) 위의 자료.

과 합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남북관계 변화를 기대케 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3월 18일에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 대북지원 참여확대, 민간 대북지원 모금 활동 규제 완화,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4월 30일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민간주도의 경협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경제, 종교, 학술, 언론, 문화예술, 이산가족 등 각 분야에서 인적교류 및 방북이 활성화 되었다.<sup>22)</sup>

경색된 남북관계가 변화하면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대내외적인 정치여건도 긍정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과 교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팽팽히 다시 긴장되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하던 남측 관광객이 관광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 장소에 대한 의견 역시 합치되지 못하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하는 경우에 남한을 단순 경유지로 삼을 것인지, 원소재지인 북한에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였다.<sup>23)</sup>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 변화를 통한 남북 간 반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 다시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남과 북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의견을 합치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 역시 이전 시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이 토졸리 총재는 자신이 직접 북관대첩비를 가

22) 강보배 · 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5~216쪽.

23) 위의 논문, 216~217쪽.



지고 북한으로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길 원했고 남측 인사를 포함한 대규모 방북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가이토졸리 총재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당시 북관대첩비반환추진위원회에 소속된 가키누마 스님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 정부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이 토졸리 총재의 적극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1차와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24)</sup> 이 시기, 북관대첩비 반환 재논의 역시 북한과 위원회 측 간 조율이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이 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다소 어려웠다.

#### 4. 2003 ~ 2006년: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고국으로

2003년 5월 한일불교복지협회가 비 반환이 2003년 8월 성사 단계임을 통보 하였고, 문화재청과 외교부 등에 정부차원의 이운행사 지원을 요청 하였다.<sup>25)</sup> 그러나 2003년 9월 1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사 측은 17일 “어느 한국 단체에도 반환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남북 통일뒤 통일정부가 정식요청을 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에서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반환할 수 없으며 가져올 때와 같이 남북이 하나가 돼야 하기 때문에 북에도 반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sup>26)</sup> 2003년 12월 18일, 외교통상부는 비의 원소재지가 북한이므로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 관계로 정부가 점유주에게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일

24) 위의 논문, 217쪽.

2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26) 「日帝가 강탈한 조선 '북관대첩비' 야스쿠니 숲에 방치」 『중앙일보』 (온라인), 2003년 9월 1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882#home>>;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본정부의 입장과 남북 간 합의가 도출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요청이 있어야 반환 할 수 있다는 야스쿠니 신사 측의 공식 입장을 확인 후에 문화재청에 이를 통보하였다.<sup>27)</sup> 즉, 야스쿠니 신사측은 북관대첩비를 사실상 반환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2004년 7월, 일한불교복지협회의 가키누마 스님이 방한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을 주장하였다.<sup>28)</sup> 일본 불교계의 이러한 행보는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일본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협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은 정부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같은 달 30일, 외교통상부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 장관급회담시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를 북측에 협의 요청했다.<sup>29)</sup> 남한은 정부 차원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하여 남북회담에서 해당 의제를 조율하고자 노력하였다. 2004년 11월,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민간단체, 특히 불교도연맹들 간의 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연)에서 한일불교복지협회 앞으로 초청장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이 12월 7일-10일까지 베이징을 경유하여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방북을 신청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문화재청과 방북관련 대책회의를 하였다. 대책회의의 결과는 북측의 의견 타진을 위해 민간 단체의 방북을 허용하고 남북합의는 정부기관(문화재청: 문화보존지도국)간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방북 결과, 남북 불교단체 간 북관대첩비를 한국을 거쳐 북으로 인도키로 합의 했다는 주장 외에는 별다른 성과

27)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5쪽.

28) 위의 책, 30쪽.

29) 위의 책, 31쪽.

는 없었다.<sup>30)</sup>

2005년 1월, 북관대첩비반환범민족운동본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당시 상임고문으로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추대되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광복 6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즉 당해년에 비 반환을 매듭짓자고 언급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원웅 의원은 국회 내 반환 추진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하였다. 2005년 2월 1일, 총리실 산하 민간기구로 2005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이 발족되었고,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북관대첩비 반환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을 북측 아태재단에 제안하였다. 2005년 2월 21일, 북측 민화협은 남북공동위 구성보다 남측 비반환추진위가 북측 조불연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회신하였다.<sup>31)</sup> 2005년 3월 1일, 범민족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인 일한불교복지협회 가키누마 스님이 야스쿠니 신사 측과 면담하였고, 국회 내 반환추진 그룹을 구성하겠다고 했던 김원웅 의원이 일본 부외무대신과 면담하였다. 2005년 3월 1일, 일본 야스쿠니 신사 측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하면 반환할 것으로 약속하였다.<sup>32)</sup>

2005년 3월 2일, 문화재청은 남북공동 반환추진 방안을 남북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통일부에 요청하였고, 일본 문화청에 야스쿠니 신사측 당국자 면담과 북관대첩비의 실태조사를 위한 협의를 의뢰하였다.<sup>33)</sup> 8일에는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 추진기획단, 문화재청(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이 제1차 대책회의를 하였다. 이

30) 위의 책, 31쪽.

31) 위의 책, 31~32쪽.

32) 정운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통일한국』 제268권(2006년 4월),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33)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회의의 결과로 외교통상부는 일본 외무성과 접촉하고 문화재청은 야스쿠니 신사와 접촉해서 진의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측이 정부차원의 개입을 기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sup>34)</sup> 1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공식화 되었다. 또한, 3월 28일에는 남측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간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으로는 1. 북관대첩비의 원소재지 복원을 위해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2. 기념 행사는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개최한다는 것이었다.<sup>35)</sup>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 기관들의 제2차 대책회의는 4월 1일에 개최되었다. 당시 일본 외무성이 민간단체의 남북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고 정부차원의 합의서를 요구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남북한의 합의 주체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었다. 남측은 문화재청장을, 북측은 문화보존지도국장을 합의 주체로 하고, 합의 형식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율되었다. 또한, 대일 관계는 외교통상부가, 대북관계는 통일부가, 국내 관련 단체 합의는 문화재청이, 북관대첩비 반환 행사는 광복60주년추진단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또한, 언론대책은 외교통상부로 일원화 하도록 각 관계 기관들 간의 협의를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사안들을 어느 부처가 관할할지가 결정되었다.<sup>36)</sup>

2005년 4월 20일, 문화재청의 관계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여 책임자를 면담하였다. 여기서 야스쿠니 신사 측은 민간 베이징 합의서에 대한 남측 문화재청장과 북측 문화보존지도국장의 서면 추인으로 반환 가능성을 표명하였다. 3일 후인 4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AA회의에서 북측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면담하고 북관대첩비 반

34) 위의 책, 32쪽.

35) 위의 책, 32쪽.

36) 위의 책, 32쪽.

환 등 협의를 위한 회담을 5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27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대책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결과 정부 내 주관부처는 문화재청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반환추진 기구의 만관합동 구성 및 남북당국자 회담 추진에 대해서는 총리에게 보고 후 문화재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sup>37)</sup> 2005년 5월 12일 문화재청은 북한문화성에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남북문화재 당국회담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는 북한 당국과 합의한 것과 같으므로 남북한 별도 합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sup>38)</sup> 5월 27일, 문화재청은 6·15선언 남북실무자 접촉을 통해 북측 문화상에게 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남북 합의를 제안하는 서신을 북측에 전달하였다.<sup>39)</sup> 이에 따라 2005년 10월 12일 북관대첩비 반환합의서 서명식이 체결되었다. 2005년 10월 20일, 북관대첩비는 100년 만에 한국하였다.

남한으로 반환된 북관대첩비는 10월 28 ~11월 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다. 2006년 2월 13일 개성에서 북측 인도 실무협약이 타결되었고 이에 따라 3월 1일, 3·1절을 맞아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이 개최되었다. 이에 대해 북측 김정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은 전통과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일본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할 중요한 계기”라며 “북과 남이 공동 노력으로 비를 되찾는 것을 계기로 일제가 빼앗은 문화재를 모두 되찾는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남한의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도 환송사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은 이 시대의 문화 의병운동”이라며 “남북한 문화재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위

37) 위의 책, 32~33쪽.

38)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39)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3쪽.

해 문화재 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한다”고 하였다.<sup>40)</sup>

2005년의 이러한 합의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남북 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노력을 위한 공동선언이 성사되면서 남북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당시 남한의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북관계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2002년 제2차 북핵문제와 2004년 김일성 사망 10주기 기념 조문단 관련 사안, 2005년 2월 북한의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과 핵무기 보유 선언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5년이 ‘6.15공동선언 5주년’, ‘2005년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북관대첩비 도일 100주년’과 같은 역사적인 기념일이 겹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부처 간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남북 합의의 기회 역시 모색되었다.<sup>41)</sup>

또한, 당시 북·일 관계 역시 국교정상화를 중심으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2002년, 2004년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과 평양선언의 발표는 북일관계의 정상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고이즈미 수상의 방북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남북관계는 임동원 특사의 방북 이후,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급진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의 진전 배경과도 무관치 않았다.<sup>42)</sup> 남북관계의 진전은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고이즈미의

40)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41)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와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9~220쪽.

42)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172쪽.

방북은 북일관계의 진전을 의미했다. 북한 역시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대폭적인 양보를 통해 북-일 평양공동선언이 가능했다.<sup>43)</sup> 평양선언은 과거사 문제, 청구권 문제, 납치자 문제, 핵·미사일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일본의 요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음을 보여주었다.<sup>44)</sup> 그러나 납북자 문제를 결국 넘어서지 못하고 북일관계는 국교정상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남북한 간 합의는 북관대첩비 반환을 뒷받침 없이 마무리하고자 했던 일본에게는 중요했다.<sup>45)</sup> 1970년대 남한의 반환 요구에 대해 조총련이 반발하여 무산되었던 바 일본 측은 '남북 정부 차원의 공식 합의'를 요구했으며, 이는 외교부에서 일본 외무성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의 입장을 확인한 내용이었다.<sup>46)</sup>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국교정상화로 귀결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 정부 차원의 공식 합의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격화된 대내적인 여론과 북일관계·한일관계를 고려하여 요구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 IV. 왜 2003년 - 2006년이었는가?

다른 시기와 달리, 이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다.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개성공단을 통한

43) 위의 논문.

44) 위의 논문.

45)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00쪽.

46) 위의 논문.

남북교류협력이 공고화 되지 않았다면 북관대첩비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개성공단이 없다고 해서 북관대첩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지를 논하기엔 다소 어렵다.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에서 국가 간 관계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았기에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도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가 반출된 시기, 즉 분단 이전의 한반도로의 반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남북 간의 관계 역시 문화재 반환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2003-2006년 노무현 정부 시기와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시기의 남북관계를 비교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정부 역시 경색된 남북관계를 교류협력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김대중 정부 시기에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국면은 이러한 논의들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논의 역시 2002년 2차북핵위기 등으로 경색된 군사적 긴장국면이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군사안보적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완화시키며 남북 간 교류협력 공고화를 이끌어내며 남북한 간 서로의 행동에 대한 값비싼 신호 'costly signal'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시민단체와 문중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북관대첩비 반환 논의를 국가차원으로 이끌어내면서 뒷받침이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반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장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을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 1.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협력의 공고화

북관대첩비 반환에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지점은 개성이었다. 1990년대에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반환 경로를 논의했다면, 북관대첩비 반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 시기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이 이루어졌다. 2000년대 초, 반환 논의와 1990년대 반환 논의의 시대적,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의 움직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1990년대가 더 활발하게 움직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물론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은 이전 시기의 경험과 각 관계기관과 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민 단체나 종교단체의 움직임만을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엔 다소 공백이 생긴다.

2005년에 역사적인 기념일이 겹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다. 2005년은 을사조약 체결 이후 100년이 되는 해였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기점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범국민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북관대첩비 반환결정을 분석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실례로,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라는 해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리선권 남북고위급 회담 단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시기적으로 공동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렵다” 전했다.<sup>47)</sup> 이와 관련해서 남한에서는 당시 북한이 2019년 하노이북미정상회담 준비에 모든 여력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라고 분석하였다.<sup>48)</sup> 이와 더불어 남북한은 임시정부와 관련하여 견해

47) 「3.1절 100주년 공동기념 행사 무산…北”시기적 어렵다” 통보」 『KBS NEWS』 (온라인), 2019년 2월 21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43638>>.

48) 「“3·1절 100주년 남북공동행사무산 …北”시기적 어렵다” 통보(종합)」 『연합뉴

차를 보였고, 남북한 간 협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sup>49)</sup> 이러한 분위기에서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행사는 무산되었다. 즉, 역사적인 기념일이나 민족사적인 기점이 범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요인만으로 접근하기엔 역시 다소 공백이 생긴다. 사실상 북한에게 남한과의 3·1절 100주년 공동행사보다 더 중요했던 사안은 하노이북미 정상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념일이나 민족사적인 기점은 우선순위에 서 밀릴 수 밖에 없었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이 단순하게 단발성의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정권에 따라 남북관계는 갈등과 협력을 오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우호적이다 하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군사안보적 이슈나 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남북관계는 온도차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유지에 대한 값비싼 신호(costly signal)로 작용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 교류·경제협력의 지속성과 가시성을 모두 확보한 ‘믿을만한’ 약속으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믿을만한 남북 간의 약속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간 합의서 채택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330만㎡)개발 착공을 시작으로 2004년 6월엔 시범단지 입주기업이 계약체결(15개 기업)을 했고, 2005년 9월에는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분양(24개 기업)이 있었다.<sup>50)</sup> 개성공단 사업은 북관대첩비 최종 반

스』(온라인), 2019년 2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48251504>>.

49) 위의 자료.

50)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

환 결정이 이루어진 2004-2006년 사이에 합의서를 넘어 실질적인 가동을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최종 합의 전인 2005년 5월 12일에 북한 문화성에 제의한 당국회담에 대해 북한이 종교 간 합의는 북한 당국과 합의한 것과 같아 남북 별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sup>51)</sup> 화답을 보냈다. 실제로는 북한이 화답을 보낸 한 달 뒤인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남북한은 이 회담을 통해 남북 간 공식대화창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관대첩비 반환에 합의하였다. 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한은 8.15 남북 공동행사관련 사안, 한반도 비핵화, 남북이산가족상봉,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서해 공동어로, 농업협력 추진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협력에 합의하였다.<sup>52)</sup>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공동 보도문 내용을 보면, 남북한은 제일 먼저 8.15 남북공동행사에 대한 실무접촉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한은 해당 실무접촉을 7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sup>53)</sup> 또한, 남북한은 농업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으로 남북장관급회담 산하에 각기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51)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 만에 귀향」, 92쪽; 강보배·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218~219쪽;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2쪽.

52)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따르면, 북관대첩비 반환에 관한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5.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에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당면하여 남과 북은 일본으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온라인), 2005년 6월 24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75073024#pressRelease>).

53) 위의 글.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여기서 남북한은 1차 회의를 개성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sup>54)</sup> 장관급 회담의 합의 내용들을 보면 남북한의 협력 분야는 점차 확장되고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개성’이라는 지역은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간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고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환국한 북관대첩비를 원소재지인 함경북도 길주군으로 인도인수하기 위한 실무협약이 2006년 2월 13일 개성에서 타결되었고, 다음 달인 3월 1일, 3.1절을 맞아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이 개최되었다는 점 역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라는 맥락에서 파악가능하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의 공고화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1990년대 반환 논의의 장애물이 되었던 한국 패싱의 위험성도, 판문점을 통과할 때 유엔평화유지군 소속 병사들이 호위해야 하는 제3자의 개입 가능성도 불식시켰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간 협력공고화는 남북경협의 상징인 동시에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북관대첩비가 고국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남한과 북한 간 값비싼 신호이자 믿을만한 약속으로 작용했다. 북관대첩비 반환 최종 합의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의 공고화 과정의 맥락에서 파악가능하다.

## 2.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북관대첩비의 반환이 결정된 2005년을 중심으로 보면 이 당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하게 협력 및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 추진기획단,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실 산하 관

---

<sup>54)</sup> 위의 글.

계 기관들, 국회 등 여러 기관과 조직들이 협력하였다. 우선,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반환의 주무부처로서 민간단체와 정부, 더 나아가 야스쿠니 신사 측과의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일본과의 외교를 통해 야스쿠니 신사로부터 북관대첩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했고, 통일부는 북관대첩비 반환 문제를 남북회담의 의제로 공식화하도록 요청했으면, 북한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기구로 발족된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은 북관대첩비 반환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사안들을 전담하였다. 또한, 국회 역시 북관대첩비 반환을 추진 그룹을 구성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에 대한 적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표 1>과 같이, 노무현 정부의 관계 기관들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 관계 기관 대책회의(2차),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급 국장급 대책회의(2차),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남북 차관급회담 개최, 총리주재 당정회의회 등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1>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한 정부차원의 움직임(노무현 정부)

일시	내용
2005. 3. 8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대통령비서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 문화재청)대책회의 개최(제1차)
2005. 4. 1	북관대첩비 반환 관계기관(대통령비서실, 외통부, 통일부, 60주년추진 기획단, 문화재청)대책회의 개최(제2차)
2005. 4. 13	국무총리실 주재로 7개 관계기관(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통일부,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광복60주년추진단)국장급 대책회의 개최
2005. 4. 27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계기관(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통일부, 문화재청, 대통령비서실, 광복60주년추진단)국장급 대책회의 개최
2005. 5. 9	통일부 주재로 관계부처회의(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 통일부, 외통부,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외 2개 부처)
2005. 5. 16-17	남북 차관급회담 개최(비공식 접촉을 통해 비 반환 합의서 체결 요구)

일시	내용
2005. 5. 17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 방문 기념행사 등 추진방안 협의(국장급회의)
2005. 5. 23	총리주재 당정협의회에 북관대첩비 문제를 의제로 보고
2005. 5. 27	6·15선언 남북실무자 접촉을 통해 문화재청장이 북측 문화상에게 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남북 합의를 제안하는 서신 북측에 전달

출처: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30~33쪽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정리.

이처럼 노무현 정부는 북관대첩비를 위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정부 차원의 의제로 선정해서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북한과 공식적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 V. 맺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과의 관계 역시 역사이슈와 맞물려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협력하여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낸 사안을 통해 3개국이 어떻게 왜 협력이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은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관계 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정 이슈 또는 사안이 왜 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만큼이나 왜 협력이 가능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은 교착화 된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로 반출되었던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 간 교류협력의 결과이자 서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와 더불어 남북일 3개국 관계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관대첩비 반환이 결정된 2000년대 남북관계는 개성공단이라는 중심축을 통해 다른 시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로 간 협력과 신

위를 강화하였다. 즉, 남한과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이벤트성의 이슈에 의한 협력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넌제로섬(non-zerosum)' 게임에 입각한 관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1990년대와는 다른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역시, 남북 관계는 상호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군사안보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북관대첩비 반환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점에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류의 공고화는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데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남북 협력은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문화재 반환을 위한 실무진들의 노력과 의지는 북한의 협력을 보다 가시적으로 이끌어내었다. 문화재청을 포함하여 통일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 산하 관계 부처들은 북관대첩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였고, 해당 사안을 남북 간 공식의 제로 포함시켜 계속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또한,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남북 간 의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남북 교류협력의 공고화를 통해 일본이 반환을 결정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남북이 협력하여 문화재를 반환한 경험은 개성공단 내 위치한 남북공동연락폭과 사건 이후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일본을 포함하여 각 국에서 되찾아야 할 문화재는 여전히 존재하며, 주변국의 역사왜곡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되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문제에 대응 및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은 공동 대응함으로써 일본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접근이 민간단체의 노력과 관심,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단체의 노력, 그 중에서도 특히 불교도연맹은 북관대첩비가 반환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만

본 논문은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호적인 남북 관계가 기반이 되었을 때 가능했음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북관대첩비 반환 결정은 민간단체의 지속적인 움직임과 노력과 더불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이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남과 북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보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북관대첩비의 경우, 원소재지는 북한, 일본과의 수교 주체는 남한이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보다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문화재 반환의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분단된 한반도가 일본을 포함하여 타국에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되돌려 받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문화재 반환과 국가 간 관계는 완전히 무관한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북관대첩비 반환은 남북관계의 전환과 더불어 남북일 3개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북한도 2019년 12월 1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역사유적 북관대첩비>에서 북관대첩비의 민족사적인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역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이다. 역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인민들에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줄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우수한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갈수 있다.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찬란한 문화전통을 창조한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역사유적유물들가운데는 국보유적인 북관대첩비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관대첩비와 같은 비가 우리 나라에 있다는것 자체가 우리 민족의 커다란 긍지이고 자랑입니다.> (...중략) 그러시면서 지금 북관대첩비를 참관하러



오는 사람들속에서 비문이 한자로 되어있기때문에 옆에 비문을 번역한 해설문을 따로 만들어세워 그 내용을 읽어볼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것이라고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북관대첩비는 왜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우리 선조들의 투쟁력사를 연구하는데서와 인민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데서 큰 의의가 있는 나라의 귀중한 국보이다.

북관대첩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북한이 인정하는 민족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북관대첩비를 중심으로 남북은 다시 한 번 교류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관대첩비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2006년 삼일절을 기념하여 개성에서 북측으로 인도된 북관대첩비가 원소재지에 잘 복원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남북관계를 새로이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북한은 북관대첩비 반환을 중심으로 일본에 의해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시 고국으로 되찾아오는 작업을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을 공동으로 시작함으로써 관계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역사적 이슈에 합의하고 문화재를 되찾아온 경험은 남북이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정표가 된다. 남북한의 이러한 경험은 더 나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남북일이 역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가야하는지 그 방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은 북한과 무단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고국으로 되찾아 오기 위해 남북 공동학술연구나 북관대첩비 관련 기념사업, 향후 문화재 반환을 위한 관련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남북한, 더 나아가 남북일 상생의 관계를 모색할 때이다.

## 【참고문헌】

- 문화재청, 『북관대첩비 환수추진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2005.
- 강보배 · 정준호, 「다중흐름모형(MSF)을 활용한 문화재 환수과정 분석: 북관대첩비 환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1호, 2016 봄, 205~229쪽.
- 구진봉 · 최은봉, 「북관대첩비 반환 과정 속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의 역할: 문화재 소유권의 쟁점화와 협상의 국면전환」 『문화와 정치』 제9권 2호, 2022, 213~246쪽.
- 박선희, 「문화재 원소유국(country of origin) 반환과 프랑스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51집 4호, 2011, 213~235쪽.
- 정영철, 「북일관계의 과거와 현재: 명분과 실리의 외교전략」 『북한연구학회보』 제9권 1호, 2005, 157~184쪽.
- 정윤경, 「북한: 개성에서 인도인수식: 북관대첩비 100년만에 귀향」 『통일한국』 제268권, 2006, 92쪽.
- Rhee, Boa, 「The Repatriatio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Bukgwan Dae-chopbi) Removed during the Russo-Japanese war」 『한국시베리아연구』 제12집 1호, 2008, 241~281쪽.
- 『노동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KBS NEWS』  
『한겨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15차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2005년 6월 24일)」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75073024#pressRelease>>.  
문화재청, 「관(官)과 민(民), 남북 협력으로 환수 북관대첩비」 <<http://www.cha>

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232&bbsId=BBSMSTR\_1008&mn=NS\_01\_09\_01).

통일부, 「개성공단 사업추진 경과」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 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kaesong%20IndustrialComplex/status/promotio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노무현-고이츠미 한일정상회담」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95&pageFlag=&sitePage=1-2-1>>.

嘯海生膽, 「咸鏡道 壬辰義兵 大捷碑文」 『대한홍학보 제5호』(온라인), 1909년 07월 20일, <[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https://db.history.go.kr/item/bookViewer.do?levelId=ma_011_0050)>.

## Return of Bukgwan Victory Monuments and Inter-Korean Relations

Oh, Eunkyung (Sogang University)

### Abstract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as returned to the original location of North Korea through South Korea in 2005. Four times of discussions were held on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hich was taken out of the country during Japanese colonial era and was finally returned to its homeland in 2005.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the previous three discussions did not lead to the result of return. Especially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Koreas served as an obstacle to further progress in the discussion. While it is true tha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religious organizations steadily paid attention to the return of the monument, that alone has limitations in explaining why the return of the monument was finally decided in 2005.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focusing on the amicable inter-Korean relations in 2005, when the return of the Bukgwan Victory Monument was decided. This approach will allow us to grasp in various ways the role of relations between countries in the decision to return cultural assets.

Keywords: Bukgwan Victory Monument, inter-Korean relations, cooperation, interstate relations, return of cultural assets

오은경 (Oh, Eunkyung)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전공은 국제정치다. 석사학위를 북한학으로 받았다. 현재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이며, 주요 연구주제는 국가 간 관계, 남북관계, 군사안보, 핵 전략 등이다.